특검 '이심전심' 논리 법원서 제동…대구 법조계 "무리한 기소"

윤·추 2분5초짜리 통화기록, 특검이 내민 유일한 증거
1심 재판부 "대통령 의중 승낙했다고 보기엔 어려워"
법조계 "법리구성 부족"·"항소심서 뒤집히진 않을 것"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경호 대구시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이심전심'·'줄탁동시' 등 의도를 파악하고 행동에 옮겼다는 논리다. 추 시장과 윤 전 대통령의 2분5초 통화기록은 특검팀이 재판부에 내민 유일한 증거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검팀의 논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 논리 통하지 않아…형소법 대원칙 작동

이날 1심 재판부는 15분 남짓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특검이 주장한 핵심 대목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추 시장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에 해당하거나, 내란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 시장이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시장이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한 점, 다른 의원들과 당사에서 나와 국회로 진입했다는 점 등이 재판부 판단의 근거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의 전체 취지는 미리 알려 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추 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실과 당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당론을 모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봤을 때 특검의 증거만으로는 대통령 의중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특검이 계엄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으로부터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추 시장이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답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미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이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그 내용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상황"이라며 "추 시장이 한동훈의 입장을 반대한다고 발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가 바라본 무죄 이유

대구지역 법조계 역시 이번 무죄 판결의 핵심은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결국, 특검팀의 증거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봉기 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하려면 내란 가담 인식과 표결 방해의 고의, 구체적인 가담행위가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모와 가담에 대한 증명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입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특검의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도 통화 내용과 집결 안내 경위 등을 통한 표결 방해 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정상환 변호사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이뤄진 것으로, 특검이 주장한 표결 방해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긴박한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우왕좌왕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적용한 것은 무리한 기소"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 해제 표결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참여하도록 해야 할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무죄 뜨자 지지자 "추경호" 연호
최재훈 달성군수 등도 현장 지켜

서울중앙지법 앞 풍경

장동혁·정점식도 주먹 불끈
일각선 특검기소 비난 목소리
추 시장 "긴 시간 응원, 고마워"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지지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인사를 건네고 있다. 신헌호 기자

18일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주변. 이날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추 시장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법원 주변에서는 비상계엄과 추 시장의 1심 선고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서초동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선고 시간이 가까워지자,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대구 달성군 관계자 등 추 시장을 응원하기 위한 이들과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특히 달성군에서 오랜 인연을 맺어온 최재훈 달성군수와 하중환 대구시의원을 비롯해 이재화·전경원 전 대구시의원도 현장을 지켰다. 최 군수는 "1심 판결에 따라 달성군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가 영향을 받는데, 지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휴가를 내고 왔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추 시장이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자, 지지자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추 시장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은 선고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오후 2시부터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다가 15분 만에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추경호"라고 외쳤다. 일각에선 특검팀의 정치적 기소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과를 기다리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추 시장이 법정을 나오자 포옹하는 등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 자리에는 이인선, 권영진, 이진숙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했다.

추 시장은 자신을 기다린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추 시장은 "긴 시간 믿고 함께하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특검이 항소하면? 괴롭히기밖에 안돼"

추 시장 측 심재돈 변호사

"정치적 목적 기소…사필귀정
법 왜곡죄로 문제돼야 할 사안"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대로라면 내란특별검사팀이 항소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 항소고, 그냥 괴롭히기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법 왜곡죄로 문제가 돼야 할 사안입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직후 본보 취재진과 만난 심재돈 변호사(추 시장 측 변호인)는 이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언급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심 변호사는 "내란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모의·청탁 등을 담았는데, 재판부가 받아준 것은 하나도 없다"며 "공소 내용 중 '이런 점은 인정되지만, 이런 것은 인정 안 된다'라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건이 항소심에 가서 뒤집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시장 사건은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사필귀정이었다"라며 "증거가 있어야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되는 건데, 증거 없이 궁예의 관심법처럼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애초에 특검의 무리한 정치 기소로 본 이유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기관별 입증의 정도 측면을 비유로 들었다.



18일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만난 심재돈 변호사가 본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헌호 기자

그는 "입증의 정도로 보면 판사, 검사, 경찰마다 기준이 있다. 당연히 법원이 가장 엄격하고, 검사는 그보다 조금 느슨하다. 경찰은 훨씬 더 아래"라면서 "계엄이 해제되자마자 검찰, 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추 시장도 2024년 12월 말에 경찰 소환조사가 있었지만, 경찰도 송치하지 못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무리하게 항소를 이어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법왜곡죄에 해당되며,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사안"이라며 "모든 대목에서 특검의 주장이 인정되는 부분이 없었기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을 가더라도 바뀔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1면 '수능'서 계속

스티커가 시험 도중 떨어지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고, 새 스티커를 받아 다시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스티커 확보와 배부방식이다.

교육부가 별도 물품을 제공하지 않고, 각 교육청과 시험장 학교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교마다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능을 불과 하루 앞두고 필기구 반입기준과 스티커 부착 지침까지 잇따라 변경되면서 수험생과 시험장 학교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휴대전화 미제출자를 찾아내기 위한 위급재난문자 발송 계획도 변경됐다. 정부는 수능 당일인 19일 오전 8시30분 1차 문자를 발송한 뒤 시험 중에도 불시에 추가 발송하기로 했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며,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으면 최대 음량으로 10.5초간 울린다. 전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발송되며, 영문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정부는 감독관 휴대전화에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험 진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험에 집중하는 수험생들이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놀라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